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

• 해설 : 이승철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 발생
- ② 시장의 독점 상태
- ③ X-비효율성 발생
-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해설

③ X-비효율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 원인으로 설명되나 행정학 문제에서는 정부실패 원인으로만 출제되고 있다. X-비효율성(X-inefficiency)은 Leibenstein이 제시한 개념으로 정부나 기업이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incentives)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서, 법적 제도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행태적 요인(사명감·직업의식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경영상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이 독점적인 경우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으나, 조직 내 경영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誘因)을 잃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다. 경쟁의 부재로 인한 관리 및 경영상의 비효율로 X-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인상되며, 사회의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반면 X-효율성(X-efficiency)은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법제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관리상의 요인에 의하여 효율성이 발휘되는 경우로 기업이 처해있는 기술적 조건이 같더라도 근로자들의 열성적인 의욕과 노력(예) 사명감, 투철한 직업의식, 신바람)이 효율성을 가져오는 경우. 제도적 조건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욕관리가 효율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시장실패 원인과 정부실패 원인

시장실패 원인(정부개입의 근거·필요성)	정부실패의 원인(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근거·필요성)
① 불완전경쟁(독과점)	① 행정조직의 내부성(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사적 목표의 설정) - 예산극대화, 정보 획득과 통제에 집착, 최신기술에의 집착, 관료집단의 이익추구
② 규모의 경제(비용감산업)와 자연독점	② 철의삼각, 포획, 지대추구
③ 불완전정보(정보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주인-대리인이론, 정보의 편재[偏在])	③ 정보의 비대칭성(주인-대리인이론, 정보의 편재[偏在])
④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공유재(공유지의 비극)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비경제)	⑤ 편익과 비용의 절연(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빈익빈부익부)	⑥ 비용과 수익의 괴리
⑥ 경기불안정(실업·inflation·국제수지불균형)	⑦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에 따른 가치분배의 불평등)
	⑧ 정부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에 따른 X-비효율성
	⑨ 정치인의 단견(정책결정의 높은 시간할인율),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⑩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종결메커니즘의 부재

* X-비효율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 원인으로 설명되나 행정학 문제에서는 정부실패 원인으로만 출제되고 있음.

답 ③

[관련기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X-비효율성
- ④ 외부효과 발생

2013 국가직

답 ③

[관련기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③ X-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2016 지방9급

답 ③

[관련기출]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식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②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통한 직접공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③ 자연자원의 과다사용에 따른 고갈 등 공유지의 비극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 ④ X-비효율성이 발생할 경우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해결할 수 있다.

2019.12. 군무원

답 ④

0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해설

④ (×)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조직목표의 기능

- ㉠ 조직구성원의 행동기준
- ㉡ 의사결정의 대안선택기준
- ㉢ 권위의 수용범위를 확대시켜 줌(권위의 정당성)
- ㉣ 구성원의 응집성 확보를 통한 조정·통합 촉진
- ㉤ 조직활동의 지침·방향 제시
- ㉥ 조직의 활동과 존립의 정당성 제공
- ㉦ 조직의 효과성·성과 평가 기준
- ㉧ 효율적인 관리의 지침 제공

답 ④

[관련기출] 행정목표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0 서울9급

- ① 능률성 측정기준
- ② 조직활동의 지침
- ③ 민주화의 측정기준
- ④ 조정의 촉진
- ⑤ 조직활동 정당성의 기초

답 ①

03 결과와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① 태스크 포스
- ② 프로젝트 팀
- ③ 네트워크 조직
- ④ 매트릭스 조직

해설

• 네트워크 구조(network structure) :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회계·제조·포장·유통 등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outsourcing)를 통하여 연계·수행하는 구조.

답 ③

[관련기출]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방식은? 2007 인천7급 / 2007·2009 서울9급

- ① 사업구조
- ② 네트워크구조
- ③ 수평구조
- ④ 매트릭스구조
- ⑤ 계층구조

답 ②

0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 국회의 국정조사
-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해설

• 외부통제 : ㉡, ㉣, ㉥, ㉧ / 내부통제 : ㉠, ㉢, ㉤, ㉦

외부통제	공식통제	입법통제 ㉡ 국회의 국정조사 사법통제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법원에 의한 통제)
	비공식통제	민중통제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내부통제	공식통제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비공식통제	

답 ④

행정통제의 유형

외부통제	공식통제	입법통제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 법률 제정·개폐, 조약체결·비준 등의 ②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 예산 심의·의결, 결산승인, 기채(국채발행) 등의 ③ 국정운영에 대한 통제 :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권, 주요 인사의 임명동의·해임건의·탄핵소추와 인사청문회, 정책에 대한 질의·질문, 청원의 처리
		사법통제	① 법원의 행정소송과 명령·규칙 위헌심사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등
	비공식통제	민중통제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속·저렴한 해결, 간접적 통제권만 가짐 정당, 이익집단, NGO(시민단체), 언론·매스컴, 인터넷, 여론, 정책공동체, 시민참여·주민참여, 선거·투표(선거·투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비공식통제인 민중통제로 분류) 등에 의한 통제

내부 통제	공식 통제	① 행정수반(대통령),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공직복무관리관) ② 계층제를 통한 감독자에 의한 통제(headship, 행정적 권위 활용) ③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감사원의 결산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 ④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행정심판) ⑤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중앙행정심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처리) ⑥ 교차행정조직(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⑦ 중앙통제(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감사, 지방재발행 승인 등)
	통제 내용별	① 정책 및 기획통제: 국무회의(주요 정책 심의), 차관회의(조정 및 협의) ② 운영통제(관리통제):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정책품질관리 및 차관회의 주제 ③ 요소별 통제: 법제통제(법제처), 예산통제(기획재정부), 정원통제(행정안전부), 인사통제(인사혁신처), 물자통제(조달청), 홍보(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로 교차행정조직에 의한 통제 ④ 절차통제: 보고, 지시, 내부결재제(품의제), 장부 통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⑤ 감찰통제: 행정감사, 회계감사, 직무감찰
	비공식 통제	① 공직윤리·행정윤리(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통제 ② 행정조직 내의 비공식적 조직,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③ 공무원단체(부정부패의 내부견제, 정실인사 비판 등) ④ 대표관료제 ⑤ 행정문화: 조직 내 하위문화에 의한 통제

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 ①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 동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 동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 동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③

[관련기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해설

- ③ (×) 동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답 ③

[관련기출]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 교육행정9급

- ①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조례와 규칙은 형식적 효력에는 우열의 차이가 없으나, 상호간 충돌시 조례가 우선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④ (×) 지방자치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규칙으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① (×)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답 ①

[관련기출] 다음 중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2011 경찰간부

① 광역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④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① (×) 광역시는 대도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도로부터 분리되어, 도와 동격의 지위를 갖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② (×) 법률의 위임시 조례로서 벌칙을 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인 '벌금'을 정할 수 없다.
 ③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④ (○)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정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단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는 법률에 1명으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특별시 부시장 3명(정무1명, 행정2명)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답 ④

0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대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근무성적평정의 오차 방지를 위한 대처방법

연쇄효과(헤일로 효과; halo effect, 후광·현혹효과)	①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을 사용해 평정요소 간 연쇄효과 배제 ④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⑤ 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 ⑥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
집중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프로브스트법)
관대화 경향·엄격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일관적(규칙적·체계적) 오류	강제배분법
시간적 오차	MBO평정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선입견	직속 상사 이외에 제3자를 평정자로 활용

① (○) 일관적 오류(systematic or constant error)는 평정자의 가치관 및 평정기준의 차이에 의하여 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오차로써,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주거나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이는 평정자가 가진 평정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된다. 강제배분법은 일관적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이 된다.
 ② (○) 근접(근시성·최근성·막바지)효과(recency·proximity error)는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다.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현상이다. 근접효과 등 시간적 오류의 방지 방안으로 MBO평정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하급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평정결과 분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실제보다 높게 평가). 관대화의 경향을 완화하는 방법은 강제배분법(강제할당법)·서열법이다. 평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피평정자와의 인간관계 악화를 우려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 연쇄효과는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특징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 모든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표적 평정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연쇄효과의 방지방안 중 하나로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하는 방법이 있다(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권위를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답 ③

[관련기출] 근무성적평가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국가7급(인사·조직론)
 ① 선입견은 평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한 결과가 성격이 다른 나머지 평가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사하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② 집중화 경향은 평정척도상의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평가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③ 관대화 경향은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평가대상자와 불편한 인간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려는 상황에서 흔히 발견된다.
 ④ 근접효과는 평가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 등을 평가에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의미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통해 해당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답 ①

[관련기출] 근무성적평정 상 오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006 노동부7급
 ① 연쇄효과란 평정자가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② 집중화 경향은 평정결과가 공개되면 평정대상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 흔히 발견된다.
 ③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상대평가를 반영하는 강제배분법이다.
 ④ 근접효과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다.
 답 ②

0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해설
 ① (○)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철학은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사 모두 '최대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은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사회적 욕구를 강조한 이론은 인간관계론이다.
 ③ (○) 관리자·노동자간 협조로 과학적 직무 실시를 주장하지만 직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의 최선의 방법과 수단(the one best way)을 모색했으며 이를 위해 동작연구·시간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동작시간을 제거하여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여려 했다.

테일러(F. Taylor)의 과업관리

기업관리의 4대원리	과업관리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한 작업과학·관리원칙의 발견 • 노동자의 과학적 선발, 교육 • 관리자·노동자간 협조로 과학적 직무 실시 • 노사 균등한 직무·책임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여건의 표준화, 공구의 표준화 • 시간 및 동작연구(time & motion study)를 통한 일일 과업량 설정 • 과업량은 일류직공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 • 과업 달성시 고임금 지급(차별성과급제) • 과업 달성 실패시 저임금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부여

[관련기출] 다음 <보기>중 테일러(F. W. 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국회9급
 ㉠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 목표관리제(MBO)처럼 종업원의 과업은 조직의 상관과 협의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진다.
 ㉤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 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과학적 관리론은 직무분석에 의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를 과학적으로 선발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강조.
 ㉡ (×) 테일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분배의 몫이 증대되어 노사 간 갈등이 해결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이롭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신허명 차원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제시.
 ㉢ (○)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생산과정 분업, 동작의 표준화·과학화를 추구.
 ㉣ (×) 인간을 기계시하고 기계적, 하향적 관리를 하였으므로 종업원의 참여와 관리층과의 협의를 고려하지 못함.
 ㉤ (○)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성과향상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
 답 ②

[관련기출] 다음은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04 국회8급

- ① 조직 내의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 ② X이론의 인간형에 입각한 것이다.
- ③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④ 과학적 관리학파의 연구활동은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 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답 ⑤

[관련기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라고 보았다.
- ③ F. Taylor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호손 공장의 연구(Hawthorne Studies)가 이러한 접근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답 ④

0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해설

- ① (○)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보는 것은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
- ②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
- ③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결과(효율성·생산성),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신뢰와 과정(민주성·정치성).
- ④ (×) 신공공관리론의 관리기구는 시장(market),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기구는 서비스연계망(공동체)이다.

■ 관료제 패러다임,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뉴거버넌스) 비교

구 분	관료제 패러다임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인식론적 기초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계층제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가치	능률성	결과(효율성·생산성)	신뢰 / 과정(민주성·정치성)
정부역할	방향키, 노젓기	방향키(steering)	
관료역할	행정가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	(네트워크) 조정자(coordinator)
작동원리	내부규제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파트너십)
서비스	독점공급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방식	규칙위주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 내 관계		조직 간 상호작용

답 ①

[관련기출] 다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9 군무원9급 + 2008 지방7급(1회)

- ①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②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신공공관리론이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신뢰, 협조, 상호 의존 등에 의한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간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 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답 ②

[관련기출]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

-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해설

③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부에 놓는다. 이에 반해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권위·집권·주도와 같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co-)하기를 추구한다.

답 ③

0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이 있다.
- ㉤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옳은 것은 ㉠, ㉣, ㉤

㉠ (○) 규제정책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제한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규제대상집단(비용부담집단)의 정치적 반발이 심하고,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집행시 규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공권력(강제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므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규제법정주의).

㉡ (×)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분배정책,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되는 사례이다(단,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은 재분배정책적 성격도 일부 지님).

㉢ (○) 재분배정책은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 권리 등과 같은 각종 가치배분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으로 복지정책,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관련.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온다.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로 부(富)를 이전하는 영합(zero-sum) 게임으로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정·통제되므로 계급대립적 성격이 강하며, 정책과정 전반에서 강력한 이해대립과 사회계급·복지해택·평등·정의·국가 역할 등에 관한 이념논쟁(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야기한다.

㉣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이지만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이다.

㉤ (○) 구성정책은 헌정(憲政)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주로 정부기구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며,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거나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다. 정부기관 신설·폐지·변경,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사례이다.

답 ②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①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준예산제도가 적용되는데,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의 경비만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헌법 제54조 3항**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예 공무원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공공요금)
2.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예 행정상 손해배상액)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④ (○) •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답 ③

[관련기출]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9급

- ①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헌법상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한 경비를 제한하고 있다.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④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지출이 가능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답

[관련기출] 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찰승진
①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②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이다. ③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으로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제도의 도입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답 ②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② 품위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해설]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윤리의 내용(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율)		
법적 타율적 규범	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 * 충성의 의무를 헌법상 의무(헌법에 규정된 의무 x)로 분류하기도 함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의무, ⑦ 종교중립 의무, ⑧ 선서의무, ⑨ 외국정부의 영예 등 규제, ⑩ 직장이탈 금지, ⑪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⑫ 정치운동 금지, ⑬ 집단행위 금지
	공직자윤리법	① 이해충돌방지주의,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인도, ④ 퇴직공직자 취업제한(3년) 및 행위제한, 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행위신고(내부고발)의무 및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5년), ③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④ 공직자의 청렴의무 * 국민감사청구, 부패유발 요인 검토, 공무원행동강령의 근거, 검찰에의 고발과 재정신청 등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①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② 직무수행 관련 공평무사한 처신 및 직무관련자 우대·차별 금지, ③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와 부정청탁의 신고, ④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수수금지품등의 신고, 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⑥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기타 개별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②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추적·환수) ③ 공직선거법(선거범죄자 임용제한)
행정적 자율적 규범	추상적 규범	공무원헌장(2016. 대통령령. 기존 공무원윤리헌장을 대체)
	구체적 규범	공무원행동강령(2005. 대통령령)

답 ①

[관련기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2014 경찰간부
① 퇴직공직자의 사기업 등 취업 제한 ② 성실 의무 ③ 품위유지의 의무 ④ 종교중립의 의무	

답 ①

[관련기출]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 경찰승진
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공직 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선물수수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 윤리규범의 법제화가 갖는 효용으로는 정부의 신뢰성 향상, 윤리적 감수성 향상, 정부활동의 평가기준 제시 등이 있다. ③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으로는 과도한 정부규제 및 비현실적 법규, 낮은 정치발전 수준 등이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①

[관련기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9 경찰승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이해충돌 방지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①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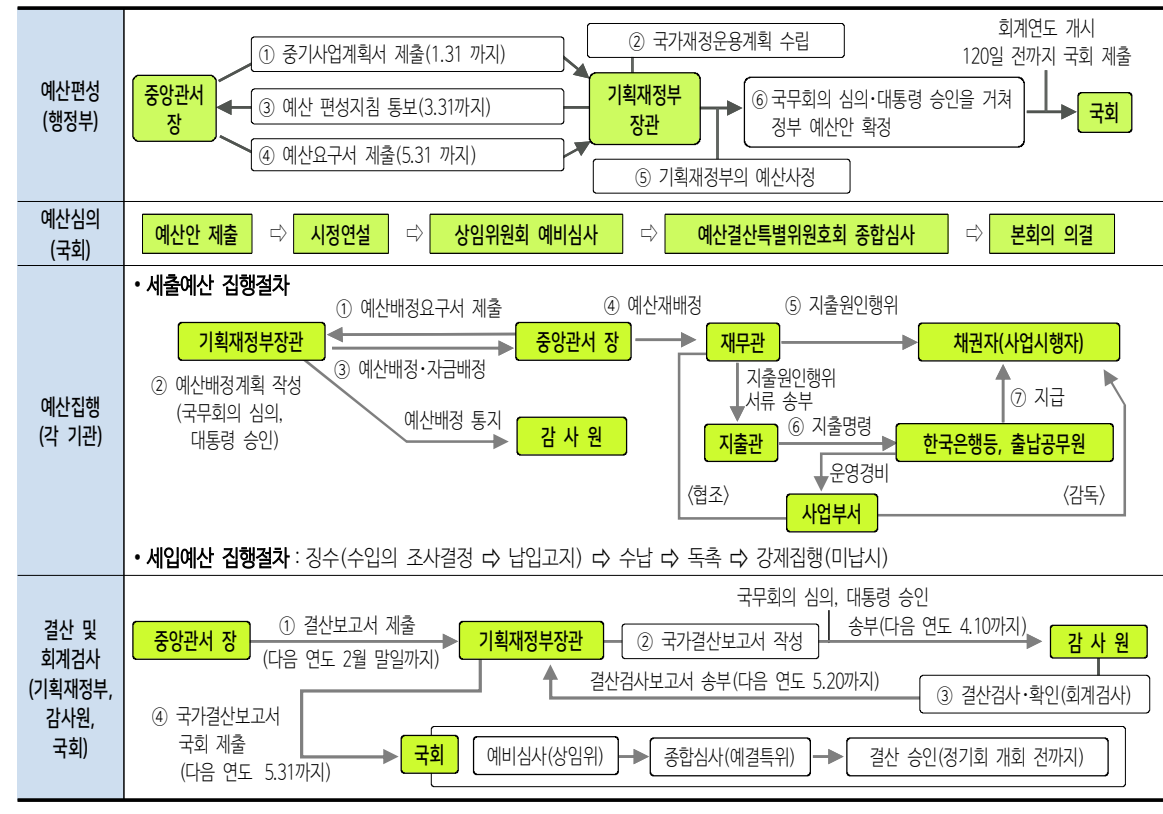
예산주기는 예산과정의 4단계(편성-심의-집행-결산·회계검사)가 시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는 3년이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④), 2021년도 예산의 집행(②), 2022년도 예산의 편성(①) 및 심의(③)가 이루어진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0년도 예산 집행	202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2021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1년도 예산 집행	202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2022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2년도 예산 집행	202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④ (×)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은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

답 ④

예산과정



13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④

[관련기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5 서울9급

-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①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①② (O) **공기업의 일반적 설치동기 - 프리드먼과 가너(W. Friedman & J. Garner)**

- ㉠ **민간자본의 부족** : 대규모 초기자본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곤란하므로 정부가 운영(철도, 전력 등)
- ㉡ **국방상·전략상 이유** : 군수산업체·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전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공기업으로 운영
- ㉢ **독점적 서비스** : 수요가 고정적이고 비용에 대한 비영리적 측면이 강조되는 수도·전력·통신 등은 사기업에서 제공하면 요금인상 등 횡포가 우려되므로, 공공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의 경우)
- ㉣ **정치적 이념·신조** : 집권 정당의 정치이념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국영기업의 증가로 인해 공기업 증가
- ㉤ **모험성을 띠거나 위험한 사업**(원자력 개발 등)
- ㉥ **경제개발의 전략적 유도**(개도국의 경우)

- ③ (O) 집권 정당의 정치이념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국영기업의 증가로 인해 공기업이 증가한다. 이 경우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④ (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조직과 독립된 법인체로서 원칙적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인사·감사·회계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는다(정부조직과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

공기업 유형 간 비교

구 분	정부기업(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일반행정기관이 운영	특별법(공사설립 법률 필요) 특정 기업적 사업 전담	특별법 또는 상법·회사법 정부가 주식 전부나 일부 소유
예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관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출 자	전액 정부예산	전액 정부출자	50% 이상 정부출자(공동출자)
이 념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조화	공공성 < 기업성
특 징	① 철저한 공공성 - 저요금정책 가능 ② 운영의 관료주의화 초래, 창의성·탄력성 부족, 만성적 재정적자	① 영미형(전형적인 이상형) ② 가장 합리적인 공기업형태 - 정부기업의 관료제화나 주식회사의 복잡성을 피함. 주식발행 안함. 국가·공공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인사·조직·재무상 자주성	① 대륙계·개도국형(과도기형) ② 혼합기업(mixed enterprise) ③ 주식의 매입·매도를 통해 정부의 탄력적인 경제정책 추진 ④ 운영이 너무 복잡
독립성	없음(법인격·당사자능력 없음)	있음(법인격·당사자능력 보유)	
직 원	공무원	임원은 준공무원(정부가 임명), 직원은 회사원(공무원 아님)	
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기업특별회계로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독립채산제 적용)	
예 산	국회의 사전심의·의결	국회의 사전심의·의결 불필요, 이사회 의결로 성립	
조직특성	단독제(독임제형) - 이사회 없음	합의제 의결기관(이사회)과 독임제 집행기관(사장·총재)의 분리	
공동점	① 기업회계방식(발생주의, 복식부기) 적용 ② 감사원의 필요적 회계검사대상(정부조직과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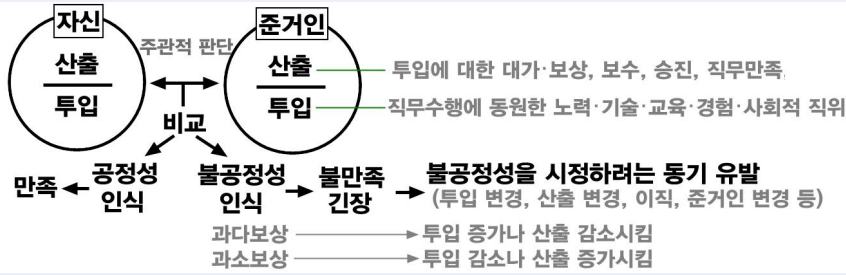
답 ④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해설

① (×) 아담스(J. Adams)는 자기와 준거인물의 투입산출비율을 서로 비교하여 '불공정할 경우' 인지부조화(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로 심적 갈등)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인지일관성 노력을 하면서 동기가 유발(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행동 유발)된다고 보았다.



답 ①

[관련기출]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2014 국가9급

- ㉠ ERG이론 : 앨더퍼(C. Alderfer)는 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구분한 후 상위욕구와 하위욕구 간에 '좌절-퇴행' 관계를 주장하였다.
- ㉡ X·Y이론 : 맥그리거(D. McGregor)의 X이론은 매슬로우(A. Maslow)가 주장했던 욕구계층 중에서 주로 상위욕구를, Y이론은 주로 하위욕구를 중요시하였다.
- ㉢ 형평이론 : 아담스(J. Adams)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 ㉣ 기대이론 : 브룸(V. Vroom)은 보상에 대한 매력성, 결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결과발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동기유발의 강도가 좌우된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X이론은 하위욕구를 중시하고 Y이론은 상위욕구를 중시한다.
- ㉢ (×) 아담스(J. Adams)는 자기와 준거인물의 투입산출비율을 서로 비교하여 '불공정할 경우' 인지부조화(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로 심적 갈등)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지일관성 노력을 하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답 ②

[관련기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8급

-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 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⑤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의 제공이 업무담당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성취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해설

- ③ (×) 맥클리랜드(D. McClelland)는 Maslow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을 통해 개인의 동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 상위욕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하고 이 3가지의 욕구가 인간행동의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훈련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선발, 배치, 이 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성취동기를 고려하고, 직무설계 과정에서 너무 쉽거나 단순 작업방식보다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가미되어 생각과 경험이 요구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③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해설

② 표본의 대표성 부족, ③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④ 크리밍효과(위광효과)는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①은 측정수단(도구)요인(instrumentation)으로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외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내재적 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누출],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외재적 요인 + 내재적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①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② 표본의 대표성 미흡 ③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④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creaming effect) 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 사전조사문제) ⑥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도 될 수 있음(선정요인과 유사).

답 ①

관련기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나열한 것은?

2020 경찰승진

-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역사요인, 측정도구요인
- ② 역사요인,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선발요인
- ③ 회귀인공요인, 크리밍 효과,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역사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④ 역사요인, 회귀인공요인,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도구요인

답 ④

관련기출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2020 경간부

㉠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 측정(검사)요소(testing)
㉡ 성숙효과(maturation)	㉣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오염효과(pollution)
㉦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역사적 요소(history)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 ㉠㉢㉣㉤㉥㉦ /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 : ㉧㉨㉩

답 ③

관련기출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2008 국가급

- ㉠ 사전 측정(pre-test)이 실험 처치에 대한 피조사자의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 ㉡ 일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부터 얻은 평가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정책평가결과는 실제 사회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할 경우 실험처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으로써 얻은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배정된 경우에도 실험적 처리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이 각 집단으로부터 상실되어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처리효과를 추정한다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

해설

㉠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실험 전 측정의 반응효과)으로서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편의(bias; 偏倚)란 편차(偏差), 즉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이다. 실험전측정의 반응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인 testing(측정·시험)요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전측정(pre-test)을 거친 경우 원변수 외에 사전측정 자체가 측정에 익숙하게 만들어 2차 측정값에 영향을 미쳐 효과를 잘못 파악하게 하여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성을 해치는 것이 testing 요인으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실험전측정의 반응효과는 ㅁ이란 실험상황에서 사전측정을 거친 경우의 결과값과 乙이란 실험상황에서 사전측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결과값이 달라져서 실험결과와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인과적 추론을 일반화할 수 없게 되는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으로서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x) 상실요소 또는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으로서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상실요소(mortality)는 조사기간 중에 관찰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상실됨으로써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의 관찰 대상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이다.

답 ③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해설

- ② (○) 주민소환의 대상 : ㉠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 ④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3.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답 ④

[관련기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회8급

-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답 ④

[관련기출]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3 이상이 찬성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해임이 확정된다.
- ②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 된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해설

- 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와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② (○)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④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 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분의 20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답 ②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해설

- ② (×)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한다.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답 ②

☞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원칙 - 7가지 기본원칙(R. Denhardt와 J. Denhardt)**

- ①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조정) 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 (Serve, rather than steer) : 정부역할은 규칙제정 같은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 관련 당사자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타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책은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사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감내할 필요는 없음.
 - ㉡ **관료역할 - 봉사(service)** :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부 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止揚)함.
-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 (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 물.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함.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
- ③ **행정의 활동방식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 : 정부는 지역공동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성을 다하도록 지원적·조정적 역할 수행.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심·협력하게 하려면 전략적 사고에 의한 계획과 민주적 실천 필요.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x)
- ④ **봉사대상은 시민 : 행정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 (Serve citizens, not customers). 공무원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함. 정부는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저버려서는 안 됨.
- ⑤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음** (Accountability isn't simple) :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함.
- ⑥ **생산성(능률성)보다는 인간적 가치(민주성) 중시** (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생산성 개선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통한 관리를 강조. 공공조직이나 공공조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인간중중에 바탕을 둔 **공유된 리더십**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음.
- ⑦ **기업가 정신보다는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의 가치 중시** (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공익은 공공자금을 그들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기업가적 관료에 의해 확보되기보다는 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시민과 관료들에 의해 더 잘 증진될 수 있음. 공무원은 거버넌스 과정의 책임 있는 참여자이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님. 공무원은 공적자금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유지자, 시민정신과 민주적 담론의 촉진자, 공동체가 성립되게 하는 촉진자, 일선업무의 지도자(street-level leader ; 길바닥 수준의 리더, 시민에 근접한 일선의 리더)로서 역할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할 책임을 짐.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제시된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의미한다.

- ① (○) 할인율(discount rate)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교환비율로서 대안의 비교평가를 위해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동일시점인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할인율과 현재가치는 반비례하며(할인율을 커지면 현재가치가 작아지고 작을수록 현재가치는 커짐),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할인율이 낮으면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할인율이 높으면 단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유리하다(아래 표에서 할인율이 0.1일 때는 장기사업인 B가 채택되나 할인율이 0.2일 때는 단기사업인 A사업이 채택됨).

구분		A사업(단기사업) - 할인율이 높을 때 유리	B사업(장기사업) - 할인율이 낮을 때 유리
비용(현재 연도)		40억	40억
편익	1년 후	55억	0억
	10년 후	0	200억
순현재가치 (NPV)	할인율 0.1	$\frac{55}{(1+0.1)^1} - \frac{40}{(1+0.1)^0} = 50 - 40 = 10$ 억	$\frac{200}{(1+0.1)^{10}} - \frac{40}{(1+0.1)^0} = 77.1 - 40 = 37.1$ 억
	할인율 0.2	$\frac{55}{(1+0.2)^1} - \frac{40}{(1+0.2)^0} = 45.83 - 40 = 5.83$ 억	$\frac{200}{(1+0.2)^{10}} - \frac{40}{(1+0.2)^0} = 32.3 - 40 = -7.7$ 억

- ②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은 사회적 후생감소를, 편익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비용·편익은 내·외부적인 것, 직·간접적인 것, 유·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직·간접적 측면 :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부차적인 것 **예** 댐 건설의 1차 목표인 홍수 및 가뭄 방지는 물론 간접적인 전력공급 증가

- 내·외부적 측면 : 정부가 예상한 대상집단에 직접 발생된 것(내부적 측면) + 대상집단 외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발생된 것(외부적 측면)
- 유·무형적 측면 : 측정 가능한 유형적 측면 외에도 측정 불가능한 무형적 측면도 포함시키되 잠재가격을 주관적으로 설정.

구분	직·간접	유·무형	편익	비용
실질적(비용·편익에 산입)	직접적	유형	연료비 절감	차량의 감가상각 증대
		무형	시간 절감	사고발생량 증대
	간접적	유형		농지 손실로 농가의 생산량 감소
		무형		풍경 훼손
금전적(비용·편익에서 제외)			새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수익 증대	구 도로변에 있던 주유소의 수입 손실

- ㉔ (×)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㉕ (○) NPV와 B/C비율은 할인율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지만 IRR은 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투자수익률(주관적 기대수익률)로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성격,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때그때 결정된다.

답 ②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해설

- ① (○) 페리와 와이즈(J. Perry & L. Wise)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공공 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유일하게 혹은 우선적으로 비롯되어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인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가 있다고 보았다.
 ④ (×) 페리와 와이즈(J. Perry & L. Wise)가 제시한 공공봉사동기의 차별적 요소로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이 있다.

합리적 차원	개인의 효용극대화 를 바탕으로 한 행동	공공정책호감도 (attraction to policy making)(공무원의 효용함수는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중요한 사회정책에 대한 동일시, 특정의 이해관계에 대한 옹호[지지] 등으로 구성)
규범적 차원	규범을 준수 하려는 노력에 따른 행동, 공익을 수행 하려는 욕구	공익 몰입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예 공익봉사의 욕구,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심, 의무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성, 약자와 소수에 대한 복지
정서적 차원 (감성적 차원)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감정적 반응 을 바탕으로 한 행동(합리적 차원과 달리 효용이 존재하지 않고 희생에 의한 피해만 따름)	동정 (compassion)과 자기희생 (self-sacrifice) 예 애국심과 같은 정의감이나 공복으로서의 의무감, 또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애정이나 동정,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정책몰입.

답 ④